
한·중관계의 명(明)과 암(暗)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그리고 최대 교역 흑자 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과 같은 현안에서 북한정권의 미래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중장기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실제적·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의 정부, 언론 및 학계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양국간 쌍무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향후 동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국간 쌍무관계의 양적인 팽창과 빈번한 교류와 같은 이면에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잠재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 국정운영 원칙, 사회적 가치(예, 민주주의), 그리고 대외·동맹관계상 많은 상이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이점이 양국관계의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양국(특히, 한국)이 양국간 단기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느냐이다. 지난 14년간의 한·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정부, 언론, 그리고 학계는 양국관계의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했다고 평가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중관계의 현황 및 중요성은 물론 양국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선별적이거나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한·중관계의 최근 현황 및 추이를 분야별로 소개하였고, 제Ⅲ장에서는 구체적인 현안 및 중장기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대내외적 요인, 단기 상황과 중장기적 고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언론·학계 차원의 타성화된 관행과 비효율적 업무 방식의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II. 한·중관계의 분야별 현황 및 추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92년 수교이후 한·중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교역관계는 한·중 쌍무관계의 주요 동인(動因)이자 주춧돌로서, 양국관계 발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한·중간 교역액은 1,006억불로서, 수교 당시에 비해 15.7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한국은 620억불을 수출하고, 234억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대중 교역흑자액은 386억불이다. 이는 1일 1억불 이상의 교역 흑자로서, 2005년도 한국의 총 교역액 5,457억불(수출 2,846억불과 수입 2,611억불) 중 총 흑자액이 235억불임을 감안할 때, 대중 교역의 중요성은 명백하다.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5년도 35억불을 포함, 총 214억불이 이루어졌고, 전자, IT,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기술집약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천여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62%(2005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중국에 갖는 '경제적 중요성' 차이 또한 명백하다.

<표 1> 중국의 대남북한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한 국	64	91	117	165	199	237	184	225	312	315	412	570	793	1,006
북 한	6.9	9.0	6.2	5.4	5.6	6.5	4.1	3.7	4.88	7.37	7.38	10.2	13.85	15.80

주: 상기 <표 1> 및 본 논문에 나타난 한·중관계 통계는 별도의 주를 달지 않는 한,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중국측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중국측 통계로는 '05년도 한·중 교역액은 1,119억불임.

양국간 인적·교육 교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방중 한국인은 354.5만명, 방한 중국인은 70.7만명(※ 방문 횡수임)으로 총 425.2만명이 왕래하였는데, 이는 1992년 13만명에서 32.7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25만명,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약 26만명으로 추정되며, 북경에만 약 6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양국간 인적교류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수는 일년에도 수차례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9월 기준으로 한·중 항공편수는 주(週)당 무려 420편이 운항되고 있다. 이는 1일 60편으로서, 주당 한국은 240편, 중국은 180편을 운항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중국에 유학중인 한국인은 총 3만 여명으로서, 중국내 총 외국인 학생 수를 8만명으로 추산할 때, 중국내 유학중인 총 외국인 5명 중 2명은 한국인이다. 이외에도 중국내에서의 '韓流'와 같은 문화 풍조, 그리고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양국관계는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에 힘입어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단,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여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중국 산업력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요인은 한·중 경제 및 교역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중국경제의 국제화 추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등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 투자 형태 다변화, 시장진입 방식의 다양화, 생산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계층의 시장공략 정책, 진출지역의 다변화, 투자기업의 현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전략을 의미하며, 이에에는 한국의 디지털 및 IT와 관련된 고급전기제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정보통신,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동차, 정보통신,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분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동북부의 특화와 국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간에는 동일 산업내 교역, 즉 '산업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중간 정치·외교관계는 우선적으로 양국이 추구하는 각자의 국가이익 및 전략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양국의 이익은 상당 부분 '합치'(converge)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UN 동시가입, 한·중 수교, 북한의 정전협정 대체노력 및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대, 황장엽 망명과 같은 1990년대 한반도의 주요 사건,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즉,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의 안정은 한국과 중국간의 국가이익이 합치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지도자간의 상호방문 및 교류도 점진적이거나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합치'된다는 사실은 중국정부가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양국은 한반도 관련 구체적인 사안 혹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 각각 상당히 다르고, 일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글라서만(Brad Glosser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것은 '공동이익'(common interests)의 추구가 아닌 '공동회피'(common aversions)로서, 양국관계가 "최소의 원칙" 하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III장에서 논의된 한반도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한·중간의 입장 차이 이외에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 대만 천수이비엔(陳水扁) 총통 취임식에 대한 한국측 주요 인사의 참석 반대, 그리고 중국측에 '비우호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입국 비자 지연·거부 등과 같은 간헐적인 문제는 적어도 한국인이 이해하는 한·중관계의 '발전'과 현실간의 거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중관계의 제반 분야 중 군사·안보분야는 진전 속도가 가장 늦고, 상호주의가 결여되어 있다. 동 분야는 양국군간 "군사교류·협력"으로 표현되며, '고위급 인사교류', '정책실무 교류' 및 '연구·교육기관 및 체육교류'의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고위급 인사교류'는 한·중간 국방장관/국방부장, 합참의장/총참모장, 각군 총장 및 사령관/(군구)사령원 및 정치위원

간의 군 지도부 상호방문으로서 상징적인 의미 외, 실제적으로 군사신뢰구축(MCBM), 각종 협정체결 및 국방장관 회담을 통한 군교류의 제도화 정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현재까지 동 분야는 한국측의 중국 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례화·제도화가 결여되어 있다. 그 간 한국 국방장관의 3회 방중과 중국 국방부장의 1회 방한이 이를 반증한다. '정책실무 교류'는 정보·정책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 군 차원의 실무협의로서, 양국군의 실질적인 "군사교류·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본적으로 비정례화되어 있고, 각 군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연구·교육기관 및 체육교류'는 '비정치적 군사교류'라고 불리며, 연례 국방학술회의, 군사연구·교육기관장 방문, 육해공군 대학 및 사관학교 학생장교의 단기 방문·연수, 그리고 각종 체육교류가 포함된다. 동 분야는 대외적 '홍보성'은 낮으나, 양국군 교류의 저변 확대 및 실제적인 이해에 중요하다. 사실, 중국군을 포함한 외국군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분야별 불균형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교역분야는 '중국의 부상과 경제성장', 그리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인식이 팽배해 있다. 보다 균형적이고, 보다 정확한 시각의 정립을 위해서는 상기한 현상뿐만 아니라, '중국체제의 취약성 및 국내문제', 그리고 소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외교분야는 원칙적·수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사안 및 중장기적 이슈에 대한 갈등요인 해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간 군사·안보협력도 상징적 차원 보다는 실질적 차원의 성과(예, 해상안전 협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II. 한반도 및 역내 현안에 대한 한·중간의 입장 차이

불과 13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수교기간 중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관계의 이면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는 재중 탈북자 문제와 같은 인권·주권관련 외교현안에서 북핵문제(6자회담)와 같은 다자간 안보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한국의 중장기 안보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동 사안들은 문제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한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서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개진된다면 적어도 양국간의 불신 해소 및 미래의 사태를 대비(즉,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와 그 주요 원인을 선별적으로 제시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2002년 장길수 가족 일행이 북경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사무실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국내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정부는 동 사안을 중국의 “주권, 영토 및 소수민족”의 문제로 간주하고, 중·북 간 사안이기에 때문에 제3자(예, 한국)의 개입을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최소한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시(case by case)마다 중국측과 접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국측과의 원칙적인 합의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심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당분간 동 사안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측의 시각과 입장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측은 양국간 정상회담 혹은 고위급 회동 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보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공동성명 제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밑줄 추가)”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남북 당사자간 ‘자주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 통일은 조건적(즉, “평화적, 자주적, 그리고 단계적”)이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환언하면, 중국이 이해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과 한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간에는 실제적으로 큰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2004년에 발생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양국관계의 발전 추이에 제동을 거는 중대 사안이다. 동 사건은 중국 외교부가 2004년 4월 22일 외교부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정부 및 국민의 반발이 일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국 외교부는 1948년 이전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더욱 문제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결국 양국정부는 미봉책으로 ‘구두 합의’를 통해 동 사안의 악화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적어도 동 사안으로 인해 2004년 8월 24일 한·중 수교 12년의 상징적 중요성은 크게 퇴색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동 사안이 중국의 중앙정부가 적어도 1996년 이후 추진해온 국가사업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이고, 동 사업은 중국의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의 안전 및 영토 보전, 지역 개발 및 복지 향상,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세력전이’(power shift)를 고려한 다목적 계획임을 감안할 때, 동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으로서는 동 문제의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적·지속적으로 대처해야 만 한다.

이외에도 한·중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적지 않다. 주한미군, 미·일간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와 같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문제가 이에 포함되며,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에 대한 중국의 본질적 이익과 행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한·중의 입장 비교

사 안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 (구 햇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에 유익한 정책으로 판단 · 남북교류시 북한의 한국정부 배제는 한국의 대북우위 감안, 인내·시간을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3원칙의 고수입장 전달 · 대북 지원·경협·투자 등 실질적인 정책소개 · 한·중간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
한반도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 실제로는 '통일'이 아닌 '안정' 희망 · 사실상 북한정권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간 구체적 사안 차이 인식 · 북한급변 대비 평시 신뢰구축 필요 · 통일후 우호적 관계 유지 사전논의
재중 탈북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주권·영토, 소수민족 문제임 · 중·북간 사안으로 '제3자'(한국) 개입 불가 ·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대안은 매우 제한적임 ·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중국측 접촉, 국제여론 동참
'고구려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는 중국 변방민족사의 일부로서, 인종적, 문화적, 영토적으로 분명 한반도와와는 다름 · (한국민의 정서를 감안) 양국간 '학술적으로' 조용한 해결을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한민족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중대사안이나, 중국과의 원만한 해결 희망 · (학계) 절대불용론, 역사공유론, 혹은 패배주의 등
주한미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국이 타국에 군대주둔 원칙적 반대 · 주한미군의 역사적 배경 인정, 한·미간 협의할 사안임 · 단,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주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축이 먼저 거론할 문제가 아님 ·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정 기여 강조 · 향후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의 성격은 지역안보임을 주지시킴
북한 핵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즉, 북한)내 핵 불용 · 미국의 대북 압력/위협이 근본 원인 · 평화적 해결 지지, 국제적 대북제재 반대 · 핵없는 북한정권의 안정적 지속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필요 · 북한의 핵문제와 '전쟁불사'로 인해 한반도 안정 저해 강조 · 국제적 공조하, 북한과 대화 강조
미·일안보동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의 아시아판'임 · 일본의 독자적 정치·군사적 역할 및 대만에 대한 함의 크게 우려 · 일부는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지역안정 및 대북 억지력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 강조 · 동 사안은 미·일 쌍무적 문제임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군비경쟁 조성, 일본의 군사화, 대만에 대한 함의, 중국의 대미·대일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함 · 미사일 효과 상쇄 및 기술력 격차 우려 · 한국의 불참 입장 크게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참 입장 견지 및 문제의 근원이 북한임을 주지시킴 · 기술·재정상의 이유로 장기적 문제임

IV. 대(對)중국 전략 방향과 정책 중점

첫째,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역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국가안보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

은 단기 목표인 동시에 후자를 지원·반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단이다. 즉, 단기적으로 경제협력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평시 신뢰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추진해야 한다. 후자의 일례로는 중장기적 전략방침의 수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 추진시 맥락 및 일관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기회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성(良性)과 신뢰성'(benign and reliable)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 상기한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가전략'의 자생력(viability)에 크게 좌우되며, 이에선 (대외환경 및 역내질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 (중장기적 목표에 대한) 기획·추진력, (국내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통제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가전략에 대한 국민적 지지 유지, 사회적 응집력 제고 및 '방어적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대중국 정책의 수립과 시행차원에서 볼 때, 국가·정부차원의 '대전략' 부재 및 고위급 인사의 재임중 성과 강조, 실무자의 잦은 교체 및 부서별 협조 문제, 언론·학계 차원의 전문성 부족, 외국보도 및 중국의 국내·경제문제 치중, 정부부처와의 교류 부재, 그리고 일반 대중차원의 '우호적 중국' 혹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은 다층적인 문제로서 단계적으로나마 각 차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다층적 맥락, 다양한 목표, 그리고 가변적 순위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전략·정책도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주요 안보 현안인 북핵문제의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외에도 한반도의 안정, 북한정권의 지속·지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같은 다양한 전략·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미국이 강조하는 대(對)확산 노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중관계 유지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중국'이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사 왜곡'의 당사자라는 정책상의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북핵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한·중협력의 지속과 최근 한·미동맹의 문제는 향후 한국의 안보전략상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 미·중간 경쟁,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는 미·중·일간의 관계 변화,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의한 '포기·연루'(abandonment or entrapment)와 같은 고전적 의미의 안보 딜레마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갈등 구조 및 상이한 대한반도 이익을 감안할 때, 양국이 모두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중재자 혹은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은 논리적·선험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역으로, 미·중관계가 향후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될 경우,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안정 및 현안 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한국의 대중·대미 전략적 교섭능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강대국간의 협력·공모는 대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 전략·외교는 이와 같이 다층적·국제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 전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중 전략·정책은 양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 발전”(예, 외교·경제·군사관계 및 민간 교류·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안정·평화유지 및 통일 여건 조성”(예, 한반도 전쟁 억제, 남북대화 지원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3여 년간의 한·중관계는 분야별 불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양대 목표간의 연계성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환언하면, 한·중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 남북한 관계, 그리고 각종 쌍무 현안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고, 또한 상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 전략·정책 추진 시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국가인가”라는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추해야 한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